



## 녹색성장을 향해

### 국어 개요

-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및 발전을 부양하면서 자연적 자산이 우리의 안녕이 의지하고 있는 자연자원과 환경적 혜택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지속성장을 받쳐주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주는 투자와 혁신을 촉매 시켜야 한다.
- “평소처럼 하던 대로” 돌아간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여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는 물부족, 자원 병목현상,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 녹색성장의 기반

녹색성장은 경제적 및 환경적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

- **생산성.** 생산성 향상,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자원이 가진 최고 가치를 활용하는 자원이용 방법 등을 개선하며, 이는 자원 및 자연자산 이용에서 효율성 향상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동한다.
- **혁신.** 새로운 방법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및 프레임워크 환경조성으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를 활용한다.
- **신규시장.** 녹색 기술,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시켜 신규시장의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 마련한다.
- **신뢰성.** 정부의 주요 환경문제의 향후 처리와 관련된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의 향상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를 고양시킨다.
- **안정성.** 균형 있는 미시경제적 환경, 자원가격 변동성 축소 및 공공지출의 항목조정 및 효율성 검토하고, 공해유발부담금 부여를 통한 세입증가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지원한다.

녹색성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정적 충격의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자원 병목현상**은 물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 추가적 자본집약적 기반시설(예, 담수화 설비)의 필요성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자본의 손실은 경제활동으로 생성되는 이득을 넘어서게 되어, 미래 경제성장의 지속능력을 약화시킨다.
- 자연체계의 **불균형성**도 중대하고, 급작스러우며 고도의 손상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어류자원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이, 악화되는 기후변화를 통해 이미 생물 다양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잠재적인 임계치로 식별하려는 연구에서는 일부(기후변화, 전세계 질소 주기 및 생물다양성 손실) 상황은 이미 그 임계치를 넘었음을 예시하고 있다.

## 녹색성장의 프레임워크

녹색성장의 전략의 이행에는 ‘만병통치약’의 방법은 없다. 경제성장의 경로를 녹색경제로 만드는 데에는 체계적인 정책수립, 개발의 수준, 자원분배 및 특정한 환경 압박 정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른 것처럼 녹색경제화의 당면과제와 기회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공통의 고려사항이 모든 국가별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녹색성장 전략의 중심부에 잘 준비된 경제정책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경제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이며, 더욱 녹색화된 경제경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 성장의 녹색화에는 환경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필요로 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는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고, 명시적으로 '녹색'의제에 관련되지 않은 수 많은 재정·규제적 개입이 녹색성장에 관련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녹색' 정책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녹색성장 전략은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 특성의 상호강화에 중점을 둔다. 녹색성장은 자연자본을 생산가치의 완전한 한 요소로서 생산에서의 그 역할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프레임워크는 주요 지방, 지역 및 전세계 환경 경계를 한계시키는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성장유형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환경적 압력을 감쇠시키는 비용-효과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혁신은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생산기술과 소비행태는 일정 시점까지는 긍정적 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시점의 넘어서게 되면, 자연자본 고갈은 전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시점이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혁신이 없는 경우(고갈되는) 자연자본을 사용하는 생산자본을 대체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명하다. 혁신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도와, 자연자본 고갈을 통한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은 GDP 를 이에 대한 진척사항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자본이 부, 건강, 안녕에 기여하는 바를 간과하게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 전략은 성장의 질과 구성항목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부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진척사항 수치의 개발을 목표

로 한다. 이러한 측면과 기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소이다(상자 1 참조).

일부 공해물질의 방출과 일부 자원의 초과개발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비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적절한 정책이 이행되면,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 생태계 작동의 유지로부터 받는 혜택(자연에서 비롯된 인간이 받는 혜택)의 크기와 시기는 생태계 작동,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의 현저한 경제적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역효과·회복불가능·재앙적 결과를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경제정책 결정에는 장기적 안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성장유형과 기술변화는 서로에 대해 경로의존성과 기술·구조적 폐쇄성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영향은 축적적이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는 현재의 정책결과와 미래의 경제기회 사이에서 강력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상자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은 녹색성장의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OECD 녹색성장 전략은 20년 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 비롯된 실제적 분석내용과 정책적 모색을 활용하고 있다. OECD 녹색성장 전략은 리우정상회담에서 잉태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태로 분명하고 확신 찬 아젠다를 개발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위 아젠다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접점에서 구체적이고 계측가능한 진척단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의 집행아젠다를 동반하고, 범주의 측면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심화시켰다. 녹색성장은 복원력이 강한 생태계와 양립하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반을 되는 혁신, 투자 및 경쟁성 확보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녹색성장 전략에서는,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의 녹색화에 직접적 결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평등에 대한 우려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이행의 핵심사항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척되어야 한다.

OECD 녹색성장 전략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상황과 발전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실행 가능한 정책 프레임 개발한다. UNEP, UNESCAP, 세계은행 등의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OECD 녹색성장 작업은 리우+20 회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왔다.

녹색성장 정책과 빈곤퇴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프레임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빈곤퇴치 사이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진척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상보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다 효율적인 기반시설 제공(예, 상수도 및 교통), 환경 파괴와 연관된 열악한 보건상황 개선 및 환경적 압박을 완화하면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자연자산이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는 경우, 녹색성장은 이들이 가진 환경적 위협성에 대한 취약한 특성은 감소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

녹색성장 전략에는 회사 및 소비자의 더욱 녹색화된 행태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자본 및 기술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더욱 녹색화된 활동으로 재분배하며, 녹색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책, 시장계약 및 왜곡은 모두 시장실패를 유발하거나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 즉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민간이익과 사회에 축적되는 전체효용 사이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녹색성장 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간극을 좁혀, “녹색” 투자 및 혁신이 더욱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은 사회적 약자집단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배분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경제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동시에 경제실적 향상에 대한 유인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성장 전략의 이행에는 광범위한 두 가지 정책 세트에서 기인한 복합적인 정책방법에 관련된다. 첫 번째 세트는 경제성장과 자연자본의 보존을 상호 강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이

정책 세트에는 세금 및 경쟁활성 정책 등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효율적 자원배분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재정·규제 정책수립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세트는 기존의 경제정책과 유사한 형식이지만, 경제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유의하게 되는 정책이 추가된다. 이러한 정책배경은 자연자본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발명활동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혁신정책(1)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책 세트에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오염 발생을 더욱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가격기반 및 다른 유형의 방법의 종합적인 정책방법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의 부록 1 에는 이러한 두 종류의 정책 세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녹색성장을 정책도구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국가별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염 또는 희소한 자연자원의 초과개발에 대한 부과금 부여(세금 또는 허가비 징수제 이용)가 이러한 혼합적 정책에서 중심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가격결정기제는 주어진 목적의 달성에 지불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추가적인 효율성 획득과 혁신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더욱이, 환경관련 증세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와 복지부담금에서 왜곡된 조세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성장지향 세계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에너지와 CO2 에 대한 세금부과는 재정건전화의 큰 틀의 일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나 공공지출 삭감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별 상황이 시장수단을 사용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경우, 체계화된 규제에, 기술 지원의 활성화 정책 및 자발적 접근법이 더욱 적절하거나 시장수단에 대한 중요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격변동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반응은 많은 경우에, 특정 활동이 유발하는 환경손실을 강조하고 클린에너지의 사용 여부가 제공되는 정보 기반의 인식에 의해 강화된다.

하지만 경제에서의 혜택은 해결방안의 일부만을 구성할 뿐이다. 사회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관 및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회적 관성 및 경제적 관성이 너무 강력해서, 다수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변화가 기존의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기도 한다. 혁신을 수행하는 강력한 능력은 기존에서 돌파구를 찾고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유형을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사항이다. 혁신은 자연자본이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는 새로운 성장근원을 생성할 수 있으며, 환경적 위험성을 해결하는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녹색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녹색혁신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대다수의 환경적 외부효과에 대한 가격이 낮게 부여되어 있거나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결과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탄소가격은 기후변화를 다루는 혁신에 대한 유인책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탄소가격의 현재 수준은 낮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해결방법에는 현실과 현저한 간극이 있다.
- 경로의존성과 기존 기술 및 체계의 우월성은 일부 신규 기술이 완성되어 시장에 자리잡고,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의 경우,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혁신 지원방법은 효율적인 기술의 부상과 확산을 부양시키면서, 기술적인 폐쇄의 위험, 경쟁의 부족, 민간투자의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무역 및 투자 장벽은 녹색기술의 전지구적 개발과 확산에서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의 감소, 지식소유권(IPR)의 효율적인 보호 및 집행은 기술의 개발 및 확산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실사권 부여의 촉진을 고무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녹색화된 성장에는 특히 에너지, 물,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와 같이 차세대 기술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반시설의 구축하는 정책도 필요로 한다. 녹색기반시설 투자는 비효율적인 성장유형에 안주하는 것을 피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사회·보건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 경제 발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민간 협력, 관세와 세금의 혼합, 규제장벽의 혁신과 건전한 장기 정책 실행을 통한 주요 제도적 협력자들의 투자 활성화, 개발 보조 등을 통한 공공 및 민간 재정의 활용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점은 정책실행을 위해 프레임워크와 경제 및 환경 부분에서 일관적인 정책 세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각 부서들 및 비정부 관계기관 사이에서 고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복합적인 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전담기관의 역량을 발전시켜 녹색경제를 핵심 경제전략 및 다른 정부정책으로 통합하고 재정, 경제 및 환경 당국들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확보시키는 것이 녹색성장 정책성공의 핵심적 조건이 된다.

## 노동시장의 원활한 전이 확보

녹색화된 성장은 부상하고 있는 녹색혁신 활동에서의 숙련직을 포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염유발 활동을 더 깨끗한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환경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하는 분야에서 기존에 계약을 맺은 인력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일부 일자리는 사라질 위험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은 해당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자와 회사가 경계를 녹색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계약직 부문에서 새롭게 확대되는 부문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돕는다면, 이러한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 비용을 함께 공정하게 공유한다는 믿음을 주게 될 것이다(2).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적절한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많은 기존의 기술도 적절하겠으나, 숙련도의 불일치 및 간극이 나타날 것이다.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조정의 규모는 과장되지는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방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이려면 고용 성장 속도에 대한 효과를 제한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실제로 노동시장 성과는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책정에서 얻은 수익을 노동 수요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하면 향상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녹색성장의 원천을 부양하는 결과로써 창출되는 고용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지는 않은 것이다.

## 분배 관련 측면의 해결

녹색성장의 분배 관련 영향에 대한 고려에서 공공이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도도 중요성을 가진다. 일부 정책수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해당 우려에 대한 해결 없다면 일부 주요 정책의 수용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환경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국가 및 인구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일부에게 높은 연료가격으로 인한 손실은 즉각적으로 명백하고 중요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이 현실화되고 더 넓게 확산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목표로 하는 보상조치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이비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 집단과 관련되는 새로운 시장에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의 구축에는 고도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생물다양성과 기후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조정과 유인책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된다. 칸쿤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정서에는 긍정적인 녹색성장에 대한 진척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성장과 개발의 동력이 되며 전세계 시민들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DA)는 녹색성장의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에 대한 유인책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흐름이 부족한 대상지역에 대해 핵심 기반시설과 인적 및 체계적 역량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협력도 개발도상국에 기술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고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더욱 구체적인 접근법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향상된 글로벌 무역과 투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속성장과 녹색기술 확산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저소득 국가의 개발전망을 확인해서, 해당 국가가 내국무역 및 투자 조치로 인한 잠재적인 과급효과로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의 국가들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제가 보호주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 왔다.

현재까지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보호주의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두는 것이 권장된다. OECD 주도의 투자자유원탁회의(Freedom of Investment Roundtable)은 투자수치를 모니터링 해서, 녹색투자를 가장한 보호주의가 되지 않도록 계속할 것이다. 이 회의의 최근 성명서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자유 강화(Harnessing Freedom of Investment for Green Growth)”는 정부의 환경정책 및 투자정책 목표의 상호공조를 목표로 하며, 이는 부록 2에 첨부되어 있다.

## 녹색성장 진척도 모니터링

녹색성장 진척도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설명 및 변화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일군의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i) 환경자산 및 자연자원 사용의 생산성, (ii) 자연자산 기반, (iii) 삶의 질에 대한 환경적 측면, (iv) 정책반응과 경제적 기회.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일련의 지표는 동반 보고서, 『녹색성장을 향해 - 진척도 모니터링: OECD 지침(Towards Green Growth - Monitoring Progress: OECD Indicators)』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 연구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해 지고, 개념이 발전되면서 더욱 정교화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작업에 의하면, 환경 및 자원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국가별의 현저한 차이점은 있지만, GDP 성장과 기타 산출수치는 생산시스템으로 투입되는 환경적 성장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 생산성의 향상이 반드시 환경적 압박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나 일부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녹색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환경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업계규모만으로 단순히 평가하는 경우, 오늘날의 '녹색경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파악된다. 하지만, 녹색경제와 관련된 경제 기회, 기업정신 및 혁신은 경제 전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을 바탕으로 한정되어 평가하는 것은 환경관련 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된다.

## 녹색성장 전략의 향후 단계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OECD는 이러한 과정에 몇 가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 종합보고서의 프레임워크와 정책고찰은 국가별 특수상황에 맞도록 재단될 수 있으며, 국가 검토 형태로 후속적인 분석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보다 녹색화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함께 작동하는(또는 작동하지 않는) 양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전략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녹색성장 정책도구의 개발과 정교화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정책이행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국가검토 및 일반 정책평가에서 확보한 경험은 국가간 비교분석과 모범관행의 확인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별 정책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정책분석도구의 개발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녹색성장 지표 및 수치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용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지표에 당면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에 대한 아젠다가 주요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 OECD는 측정에 대한 아젠다를 향후 수년 동안 다룰 예정이며, 이를 통해 OECD와 다른 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전이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양한 정책수단의 비용/효용에 대한 분석 연구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제별 및 부문별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녹색경제화 과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고찰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기의 우선순위에는 식량 및 농업, 에너지부문, 물, 생물다양성 및 개발협력과 정책집행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OECD의 향후 녹색경제에 대한 작업은 유엔 산하기관,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광범위한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의 경험과 모범기준을 공유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더욱 녹색화된 성장으로 유도하는 국제적 공조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주:

- (1) 여기에는 *OECD Innovation Strategy*에서 정교화된 건전한 혁신정책을 포함한다.
- (2) *OECD Reassessed Job Strategy*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효과의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